

# ‘호남 민심’ 달랜 국민의힘, 2030 집중공략... 지지율 반등할까

### 여야, 민주당 대형 약재에도 접전 양상 국힘, 최고위원 설화 거쳐 극우와 거리 30대 민주 추월...‘청년 민생’ 강화할 듯 ‘간호·방송·노란봉투법’...원내교섭 주목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 실언 논란에 대한 고강도 징계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대거 참석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30세대 공략을 통해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4월 2주차부터 5월 3주차까지 6주간 31%에서 35% 사이를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2%에서 37%를 오가며 여야가 오차범위 내 호각세다. 그러나 지난 6주는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보유 논란 등 야당의 대형 약재가 연달아 터져 나온 기간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동기간 27%에서 37%까지 10%포인트 올랐음에도 여당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향후 정국은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한 형국

이다. 민주당은 두 약재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인 반면, 국민의힘은 당내 문제를 일단 매듭지으면서 전열 정비는 이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직후 터져 나온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논란을 2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역사관 논쟁과 함께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발언’을 했던 태영호 의원은 일단 큰 잡음 없이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징계 국면을 거치면서 강경 보수층과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지난 15일 5·18 특별법 폐기를 주장한 뒤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통합당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 95명이 5·18 기념식을 찾아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전 목사 주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대 의원 사퇴로 처리되는 최고위원 보궐선

거도 주요 변수다. 긴 징계 국면을 거치면서, ‘당심 100%’ 지도부가 총선 대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당 안팎에 어느 정도 보편화됐다. 보궐선거는 전국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이지만, 거꾸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지도부에 있는 만큼 최적의 카드를 고심하는 기류다.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김기현 대표가 강조해온 ‘청년 민생’ 공략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을 지지했던 2030세대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이탈 지지층은 국민의힘으로 쏠리기 보다는 무당층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5월 3주차 기준 국민의힘은 30대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25%였다. 5월 1주차 민주당 42%·국민의힘 32%, 2주차 민주당 33%·국민의힘 28%에서 점차 뒤집은 것이다. 18~29세의 경우 국민의힘이 20%대 초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10%대 후반에서 30%대를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 18~29세 지지율이 5월 1주차 31%에서 2주차 19%로 12%포인트 폭락했을 때 국민의힘은 24%에서 변동이 없었고, 대신 무당층이 40%에서 51%로 11%포인트 올랐다. 청년들에게 정책 입안을 맡긴다는 취지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호 정책 ‘도의 5년 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민 최고위원, 윤 원내대표, 김 대표, 김경현 광주시장위원장.

용 대기업 확대’에 이어 2호 정책으로 ‘예비군 기본권 실질화’를 예고했다. 이달 말 정책 공모전 ‘정년ON다’에서 뽑힐 입상자 7인은 정책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다수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요구(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대처 정국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중재력을 발휘해 합의 처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지난 1년간 주요 경제 국면마다 소수 여당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양국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재투표 부결 이후를 고려한 합의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쟁점 중 간호조무사 자격 조항 등은 여야간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로 전해졌다. ‘다수당의 시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말에는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회의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 방침이 뚜렷하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검증대에 섰다. 최이슬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 대통령에 지방의회 발전방안 건의

###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범사례 발표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의 조직권 부여, 기준인건비 독립 건의와 후속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건의하였다. 지난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199명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추진한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와의 만남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북구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시행해 온 제도개선 추진과제

가 수범사례로 인정받아 발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김형수 의장은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전국 최초 영상입법예고제 ▲全 회의 유튜브 생중계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e-홍보관 구축 ▲광주 5개 자치구의회간 인사교류협약 등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의장의 조직권 부여 ▲집행기관과의 기준인건비 독립 운영 ▲의회 사무기구 조직의 개선을 위한 후속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 담양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담양군의회는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18일 폐회했다. 4일간 이어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7건(의원발의 2건, 집행부 5건)과,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중국 사천성 의민시와의 “국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최용만 의장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일수를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말 업무 집중화 상황을 고려하여 제2차 정례회 시기를 11월25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하였다. 또한 박은서 의원은 “담양군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문학인을 발굴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했다. 이어서 이기범 의원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개정에 따른 담양군 대응 방향”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지원 개정의 취지 안내, 가맹점 표기 홍보물 제작 배포, 가맹점 확대 방안 모색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